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방안¹⁾

김동훈 연구위원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면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현행 재정규모보다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적 재정소요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육 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와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누리과정 재원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저출생 문제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양육 지원에 대한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에서 질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재정전망들은 각기 따로 추진되고 대상 또한 포괄적이어서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지출규모 파악 및 전체 재정 전망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정추계와 함께 영유아 등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교육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아수 감소, 국가의 책임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노후시설 개선, 아동학대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교사의 전문성 요구 증대, 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재원의 확보와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주요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양육지원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에 따라 중장기 양육 지원정책 재정추계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

1) 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보완된 것임.

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육지원정책 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재정확보 방안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양육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가.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영유아수의 지속적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영유아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공급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다소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정원충족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유치원은 출생아 감소와 함께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라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유치원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 기조로 인해 국공립 기관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이후 초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만 2세부터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아가 더 많고, 만 4,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육기능이 강한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나.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

양육지원정책 관련 재정은 16대 국가재정 분야 중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가 핵심이며,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2021년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육지원관련 세출예산은 14조 9,672억원 규모였고,²⁾ 이 중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예산 비중은 26.2%,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2.8%, 아동수당은 14.8%, 일·가정양립지원은 12.6%, 어린이집 지원 11.2%,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5.1%로 6개 단위사업 예산이 13조 8,740억원으로 92.7%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수 감소와 함께 보육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육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분담비율 만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어 편성되는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사업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양육지원정책 재정 추계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는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와 수혜자를 우선으로 한 대상 중심으로

2) 열린재정, 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DB,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https://www.openfiscald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jsessionid=b9G2Wo1VVUMKPkprTkCau2gBbEXJA9n6WomyBULBd6e1sWYJb07VJQcYWBvHVJY.IFPBWAS2_servlet_engine1?mlid=B002 에서 2021. 3. 16. 인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을 추계하고, 이외 어린이집 관리나 지원,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이나 시설비 지원, 인건비성 지원 사업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하였다.

가. 재정추계 기본설계

양육지원정책의 재정추계는 우선 수혜대상자를 우선 추정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수혜대상자나 서비스 이용자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와 주민등록 인구 현황, 보육통계, 교육통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추계대상은 0-5세, 추계기간은 2022-2026년으로 하였다.

우선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누리과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현 수준 유지 하에서 영유아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정을 추계한 결과, 0-2세 보육료는 2022~2026년까지 총 23조 2,368억원, 3-5세 누리과정비의 경우는 동기간 16조, 370억원, 양육수당은 5조 7,456억원, 아동수당은 13조 1,943억원으로 추계되어 향후 5년간 누적 58조 2,137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의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재정을 추계한 결과,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게는 향후

5년간 5조 9,587억원, 많게는 18조 6,540억원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재정소요액의 증감 변동은 크지 않다. 또한 0-2세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023년부터 증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곧바로 양육지원정책 사업 대상자로서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정 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현 수준 유지 가정하에서의 추계된 누적 재정규모와의 차이는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0-2세 보육료'의 경우 시나리오는 지원 단가를 최근 3년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만큼 매년 인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재정규모는 2021년 4조 9,867억원에서 2026년 5조 8,291억원(부모보육료 3조 6,473억원, 기관보육료 2조 1,818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인상에 따라 2026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누적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조 9,424억원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비'의 경우 지원단가 인상 시나리오 1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를 2023년까지 매년 2만원씩 인상하

〈표 1〉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규모(현행)

단위: 억원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47,348	45,710	45,198	46,193	47,919	232,368
3-5세 누리과정비	37,181	33,786	31,326	29,590	28,487	160,370
양육수당	11,042	11,119	11,402	11,757	12,136	57,456
아동수당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계	123,816	117,300	113,733	113,078	114,210	582,137

여 3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4년부터는 임금 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공립유치원과 방과후과정비는 2021년 지원단가에 2022년부터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를 매년 2만원씩 인상하여 30만원이 되는 2023년의 전체 유아학비/보육료 재정규모는 3조 1,360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이후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년 12,000~13,000원 수준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할 경우 2026년 2조 8,592억원으로 재정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비까지는 포함할 경우, 3-5세 누리과정비 재정추계 규모는 2022년 3조 9,343억원에서 2026년 3조 4,948억 규모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³⁾ 시나리오2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50% 달성과 지원단가 인상을 고려한 경우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비율 40% 목표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까지 공보육 50% 확대에 기반하여 2025년 국공립유치원 50%를 가정하였고, 2026년부터는 이용률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외 조건은 시나리오1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시나리오2로 추정된 결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유아학비 소요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유아학비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비와 신규 공립교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이나,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이를 재정추계에 반영하였다. 영아수

당은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던 기존 수당(15~20만원)이 2022년에는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양육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조 1,390억원 규모에서 영아수당이 도입되는 2022년 1조 7,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영아수당이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6년에는 3조, 742억원 규모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기준 양육수당 기준과 비교하면 2022년은 현행대비 6,12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현행기준 대비 1조 860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나리오2는 양육수당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로, 양육수당 지원수준이 보육료 지원수준에 비해 낮아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지원단가 인상 기준 앞선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부터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결과 2022년 1조 1,484억원 규모에서 2026년 1조 4,73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3은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을 설정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아수를 추정한 후 양육수당을 추계하였다. 먼저 2022년부터 출생순위가 둘째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현수준 대비 50% 인상하는 경우(0세 30만원, 1세 22.5만원, 2세 이후 15만원), 연도별 양육수당 총규모는 2022년 1조 3,567억원으로 증가하고 현행기준 대비 2,5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1조 4,911억원으로 현행기준 대비 2,75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재정추계 시나리오1은 현행 아동

3) 추가적인 분석에 의하면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2027년부터 누리과정 소요예산 또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2031년에는 4조 6,479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수당 지급단가를 유지한 채 지급연령을 2022년부터 1세씩 증가하여 2026년 초등6학년 시기인 11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로 설정하여 아동수당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1년 0-6세에서 2022년부터 7세로 확대한다면 3조 3,516억원 규모로 추계되어 현행대비 5,27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6년에 아동수당이 11세까지 확대된다는 가정에서는 4조 8,495억원 규모로 현행 대비 2조 2,827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는 아동수당 지급단가 인상 시나리오는 정액 인상과 매년 조정률(임금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지원단가 정액 인상(시나리오2a)은 현행 아동수당 지급단가를 2023년 12만원으로 인상 후 3년 후인 2026년에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액인상의 경우 현행대로 0-6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2021년 3조 103억원 규모에서 2026년 3조 8,501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 단가 유지 대비 향후 5년간 총 2조 8,440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액인상과 함께 지급연령도 매년 1세씩 확대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액이 매월 12만원으로 확대를 가정하는 2023년에는 4조, 4,468억원의 재정소요가 요구되어 현행대비 5,27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6년에 아동수당을 15만원 늘어나고 지급연령이 11세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7조 2,743억원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4조 7,075억원의 추가적 예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가 인상 기준을 임금상승률(시나리오2b)로 설정하여 아동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하였다. 임금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할 경우 2026년 3조 1,058억원으로, 현행 0-6세 아동수당 재정규모 유지 때보다 향후 5년간 총 1조 5,838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시나리오3은 출생순위에 따라 둘째아에게 현행 아동수당 지급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현재와 같이 0-6세로 할 경우, 2021년 3조 103억원 규모에서 2026년 3조 1,536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 단가 유지 대비 향후 5년간 총 3조 167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아에게 아동수당 50% 지급과 함께 지급연령도 매년 확대한다면, 2022년은 4조 1179억원, 2023년은 4조 5,529억원, 2024년은 5조 45억원, 2025년은 5조 4,730억원, 2026년은 5조 9,583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추계되었다. 이럴 경우 현 지원기준을 유지할 때 규모보다 향후 5년간 총 11조 9,125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이 표와 같다.

4.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문제점

현재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면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이 도입되어 가정에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히 누리과정을 제외한 제외한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비 매칭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양육지원정책 4개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시나리오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261,782	
3-5세 누리과정비	시나리오1	39,343	37,716	36,084	35,150	34,948	183,241	
	시나리오2	38,444	35,967	33,580	31,903	31,734	171,628	
양육수당 추계	시나리오1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120,822	
	시나리오2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64,758	
	시나리오3	13,567	13,662	14,009	14,445	14,911	70,594	
아동수당 추계	시나리오1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시나리오2a	정액인상	33,516	37,057	40,732	44,545	48,495	204,345
		정액인상+연령확대	28,245	32,022	30,969	30,646	38,501	160,383
	시나리오2b	정액인상	33,516	44,468	48,879	53,454	72,743	253,060
		정액인상+연령확대	29,375	28,819	28,904	29,624	31,058	147,780
	시나리오3	출생순위	34,857	40,021	45,620	51,672	58,679	230,849
		출생순위+연령확대	34,703	32,786	31,708	31,377	31,536	162,110
	차이(최저-현행)	41,179	45,529	50,045	54,730	59,583	251,066	
	차이(최고-현행)	4,483	8,550	11,768	15,357	19,429	59,587	
			11,837	27,986	36,045	43,989	66,683	186,540

가. 보육재정 분담 문제점

양육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단체에 이전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가 기준보조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이에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의 지방비 절대 부담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자주 세입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나 증가율이 커지는 경우 지방재정은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다.

나.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문제점

유아교육 재원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누리과정 도입과 법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을 통합한 만 5세아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유아교육재정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현재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재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정분담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정책 제언

가. 보육재정 분담 개선

먼저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수당 등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거나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이나 양육지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가 어렵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준보조율을 보육재정에만 한정하여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저출산 심화 속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⁴⁾과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환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과 아동수당이 확대되면서 현행 대비 중앙과 지방의 분담규모가 더 커지고 지방의 재정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이나 각종 돌봄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운영하도록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다.

나.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개선

첫째, 유아교육지원특별법에서는 세입을 교육세와 국고 전입금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향후 안정적 세입을 위한 재원분담비율 등을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세의 증가와 함께, 학생수, 교원수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입으로 추가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3년 연장 방식의 한시적인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명확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생 심화, 출발선 평등 등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의미를 살리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자체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된다면 누리과정의 관리·운영을 이원화하도 논의해 볼 수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원화시 관리책임의 강화와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와의 재원갈등도 없어질 것이다. 다만,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 비용부담의 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어린이집의 투명성 강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보통합의 부정과 함께 3-5세 동일 연령, 동일 교육과정의 중복성과 관리부처의 이원화 구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부문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기준보조율이 서울 50, 지방은 70-80으로 되어있으나,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서울 35, 지방 65,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50, 아동수당은 서울 50%, 지방 70%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